

현대차의 원가절감 초법적 갑질, 정부가 나서라 현대차 부당 강요 직권조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금속노조가 부당한 원가절감을 강요하며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현대차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촉구 대정부 요구 서한”을 접수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의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했다. 이에 더해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겠다는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부품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이자 폐업 명령이나 다름없다.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갑질이 다.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년간 부품사에 대한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 이른바 CR 압박을 지속해 왔다. 여기에 더해 해외 생산 물량 이전이라는 또 다른 칼날이 지역 부품사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원가는 쥐어 짜고 일감은 해외로 빼돌리는 이중의 압박 속에 경기, 울산, 경주 등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장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황영선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과 원가절감 압박으로 무너지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삶이다.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는 하나의 산업, 하나의 운명 공동체” 라고 밝혔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현재도 부품 계약을 5년 정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 단가가 인하된다. 단가인하를 감수하고라도 물량을 받아야만 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영업 이익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현대차의 단가 후려치기에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품사들의 현실”

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완성차를 살리기 위해서 부품사를 죽이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현대자동차 단가인하 압력은 로봇사업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도구로 삼은 정의선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며, “기존에는 품질 측면에서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은 국내산 부품 중심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20% 단가인하를 요구하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납품하라고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 국가의 성장이 국내 부품사들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중기부 합동 직권조사 실시 및 엄중 처벌▲하청을 보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전면 강화▲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즉시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